



CHINA WATCHING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그리고 한중관계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책 제언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최근 '구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

- 현재로서는 미국은 이를 안보적 성격보다는 경제적 성격이 강하며,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및 능력 배양 제공에 초점
- 향후 중국의 힘(power)과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수록 하나의 對중국 견제 안보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농후
- 한국의 입장에서는 개방적이고, 비배타적이며, 규범적인 방향의 '인도·태평양 전략' 을 지지해야 함
-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함. 이는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 적용한 원칙과 동일.
-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함.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우리 외교의 지경학적 공간을 확장할 기회이며, 한국 외교는 '동아시아'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함

- 한국은 '신남방정책' 하에 ASEAN 및 남아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한국 외교의 전략 공간에도 영향을 주며, 관건은 향후 인도·태평양 구상이 경제 뿐 아니라 안보적으로 어떤 양태를 띠 것인가 하는 점임
-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가이익'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한적 헤징전략 (limited hedging strategy)' 또는 '사례별 지지(issue based support)정책' 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의 최대 장애물은 북한의 핵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나타나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변화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중국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주제로 한 전략소통을 강화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줄여나갈 전략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을 위해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공동 인식하고, 이를 한중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취했던 보복조치는 '일대일로' 구상이 담고 있는 연선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소통강화·교류협력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임.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우리 외교의 지경학적 공간을 확장할 기회이며, 한국 외교는 '동아시아'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함

4. 폼페이오의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과 미국의 구체화 노력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새롭게 제시된 인도·태평양 구상은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

- 폼페이오 장관은 2018년 7월 30일 워싱턴 DC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술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억 1천3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
- 이와 같은 미국의 투자계획은 중국이 1조 달러를 들여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맞불' 성격의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 초기 투자계획을 밝힌 폼페이오의 연설은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

- 폼페이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이란 연설에서 이와 같은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투자자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헌신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착수금 성격'이다"라고 주장
- 또한 폼페이오는 "우리는 결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추구를 하는 어떤 나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비록 공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

폼페이오의 신규 투자계획 발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맞불 작전을 공식화 한 것으로 미·중간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전망이다

- 특히 폼페이오의 발표는 2018년 5월 30일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한 뒤 얼마 안 되어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 분야에서 점차 안보분야로 구체화될 개연성이 다대함
- 실제로 미국은 인도양에 대한 제해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양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와 일본에 있는 제7함대를 연계시키고 있으며, 미 해군 전력의 60%를 이 해역에 할당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태평양 구상이 구체적 전략으로 현실화되고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노골적 경제이익만을 앞세운 거래 위주의 외교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전제일 것임

5.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의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발언

- 2017년 12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4월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의 연계를 협의하기도 했음
-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창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주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 일찍부터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
-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구상이 향후 경제이익을 넘어 안보이익의 대척점을 형성하고, 미·중간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구상이 향후 경제이익을 넘어 안보이익의 대척점을 형성하고, 미·중간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출판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내용 분석

1. 미국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의 등장과 함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에서 새로운 지정학·지경학적 개념으로써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새롭게 제시

-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에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함의가 들어 있음
- 따라서 '인도·태평양'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인도양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도 포함
-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전략 구상을 모색하던 중 등장한 것으로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7년 12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되었음

- 미국의 「2018 국가안보전략(2018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별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기술하여 동 개념과 지역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공간임을 표출
- 또한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지역 장악을 견제하고, 지역의 주권과 자주를 보호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4자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언급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향후 미국의 對아시아 외교·안보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 2017년 11월 미·일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임을 확인함
- 모든 국가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및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 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전략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과 중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급부상한 중국을 경제·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포위망을 구축하는 개념적 기반이 포함되어 있음

- 실제로 미국은 2018년 5월 30일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였으며, 이는 기존 파트너인 일본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포함하는 거대 연계망을 구축해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압박하겠다는 전략구상을 담은 것임
-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의 구상을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충돌하는 형국임

2.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내용과 미국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의 교집합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육지와 해상에서 전개되는 '21세기형 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고 있음

-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실크로드 경제지대(一帶) 건설을 제안하면서 '육상 실크로드'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힘
- 시진핑은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一路)'를 공동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밝힘
- '일대일로'가 포괄하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연선에는 44억 명의 인구나 세계 경제의 29%에 해당 하는 21조 달러의 GDP 규모 국가들이 모여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지역의 평화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결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가 없음

- 그러나 중국군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연선상의 지역과 국가에 군사기지를 설치·확장하고 있으며 (지부티, 함반토타, 과다르 등),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이익' 보호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음
- 필자가 입수한 중국군부 발간 비공개문건에 따르면 2015년 중국국방대학은 일대일로 관련 내부 회의에서 일대일로 대상 국가에 인민해방군의 해외거점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전략 구상을 모색하던 중 등장한 것으로 판단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의 구상을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충돌하는 형국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지정학·지경학을 포함하는 아태지역의 거대전략 측면에서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지정학·지경학을 포함하는 아태지역의 거대전략 측면에서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구상의 본질은 중국이 추구하는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주도권 확보 시도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공간을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임
-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해양굴기(海洋崛起)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단기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은 적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구상은 정치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이념이 다른 구 강대국이 지정학과 지경학적 측면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국가이익을 확장하려는 거대전략이란 점에서 궁극적으로 타협의 여지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국방개혁을 통해 군 현대화와 연합작전능력을 제고하면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사능력을 제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군사안보전략과도 대립하는 형세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의 이상(理想)과 별개로 동 구상은 아직까지 다양한 과제와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구상과 교집합하고 있음

- 일대일로 구상을 바라보는 적잖은 관련 국가들은 이를 중국의 '신식민지화'로 보거나 연선지역의 세력균형 및 지정학적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중국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구상과의 공존 가능한 규범과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3.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보는 각국의 시각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와 한중 수교 25년을 기점으로 한중 경제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도래

-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오바마 시기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발전시킨 '수정증보판'으로 인식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
- 중국의 관변 매체들은 인도·태평양 구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
-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미·중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
- 다만 최근 미국 국방부가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중국 포위벨트를 좁혀오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반박하는 등 강하게 반발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이에서 최적화된 '이중헤징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자 의도

- 그럼에도 인도는 중국이 갈수록 자신의 앞마당인 인도양에 대한 진출을 적극화하고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드는 것이 달갑지 않아 때로는 미국의 전략에 합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인도가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국이 의도하는 중국 견제와 더 나아가 중국 봉쇄의 전략적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임

일본의 아베 수상은 이미 2012년 12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4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안보 다이아몬드' 협력을 추구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

- 아베 수상은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이 속한 태평양과 인도가 속한 인도양은 자유롭고 번영된 바다로 상호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과 인도가 파트너가 되어 미국, 호주와 함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자고 강조
- 일본 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거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나름의 전략적 구상으로 볼 수 있음

단기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은 적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오바마 시기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발전시킨 '수정증보판'으로 인식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이에서 최적화된 '이중헤징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자 의도